

아베-자민당의 재집권과 자민당 우위의 강화 : 지지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한익석 성신여자대학교

논문 요약

자민당 일당 우위체제인 55년 체제의 붕괴 이후 자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양당제적 경향이 강화되었고,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자민당과의 양대 정당 구도 속에서 군소정당들이 존재하는 2.5정당체제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한 이후 자민당 일당우위체제가 재구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아베 정권기 선거에 있어서 자민당의 우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 정당의 지지 동원 전략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기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후견주의적 연계 타파 전략을 통해 자민당은 광범위한 무당파층의 지지를 얻었지만, 이는 전통적 자민당 지지층과의 연계 약화와 선거에서 이들을 동원하는 능력의 약화를 의미했다. 2009년 선거 패배 이후 아베 집권기를 통해 자민당은 전통적인 지지층, 고정표의 확보에 주력했으며 후견주의의 일부 복원과 이익단체들과의 연계 강화, 정당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당원획득운동 등을 통해 이를 성취하고, 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주제어 : 아베-자민당, 후견주의, 보수주의, 정당 교육프로그램, 당원획득운동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3A2098969).

I. 서론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의 선거제도 변화 이후 일본의 정당정치는 다당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양당제 또는 2.5정당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압승과 정권교체는 그러한 평가를 확인하는 사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점차 하락하면서 2012년 12월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480석 중 294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불과 57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재집권하게 된 아베 정부에서 있었던 2014년과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각각 291석과 284석을 차지했으며, 2016년과 2019년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상당한 승리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자민당은 2017년 선거에서 총 465석 중 284석을 획득한 반면, 제1, 제2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희망의당이 획득한 의석수는 각각 55석과 50석에 불과했다. 이처럼 계속된 자민당의 선거 우위는 과거 ‘55년 체제’ 하의 자민당 우위 체제가 아베 시대를 통해 재구축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2009년 선거에서 참패했던 자민당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먼저 야당의 분열과 무능력을 꼽을 수 있는데 1990년대 후반 이래의 자민당-공명당 선거 연합은 정권 상실 이후에도 굳건하게 지속된 반면, 민주당은 2012년 이후 다수의 정당으로 분열되면서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즉 자민당의 재집권 이후 야당은 소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단일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했고 중의원 선거에서의 패배로 이어졌다. 대외 환경 또한 자민당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10년의 센카쿠 열도 어선 충돌 사고 이후 중국의 강경한 자세와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은 미일동맹 강화와 반중 정서를 강조하는 자민당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동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베 총리가

내건 아베노믹스(Abe-nomics)와 이후의 경제적 성과는, 비록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민당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이어졌다. 이처럼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나 야당 요인, 국내외적 환경 요인들을 자민당 우위 체제가 되살아나게 된 변수들로 꼽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정당 요인 즉 자민당의 유권자 동원전략이나 유인 정책 등에 더욱 주목하고자 한다.

55년 체제하의 자민당은 후견주의를 통한 유권자 연계와 사회당과의 이념 대립을 통한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안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 무당파층을 중심으로 후견주의 및 정치적 부패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지지 동원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한 고이즈미 총리는 무당파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했으며 자민당 정부는 전통적인 후견주의적 정책들을 약화시키거나 폐기하고, 도시지역 무당파층의 높은 지지를 받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가속화 했으며, 기존의 자민당 정치 방식을 개혁하여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과거 안정적이던 지지 기반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했으며, 그 결과는 자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 하락과 정권교체로 나타났다. 이후 자민당과 민주당의 양대 정당이 중심이 되는 경쟁 체제가 예상되었지만, 2012년 아베-자민당의 재집권 이후 치러진 선거 결과는 과거 55년 체제와 같은 자민당 일당 우위가 재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민당 우위의 재구축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겠지만, 이 글은 자민당의 지지 확보 전략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2009년 중의원 선거 이후 야당이 된 자민당이 2012년 재집권하고, 이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당 차원의 지지층 확보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한다.

II. 자민당 일당우위체제의 붕괴와 정권교체

1. 자민당 55년 체제의 붕괴

자민당은 1955년 설립된 이래 1993년 까지 집권당의 위치를 유지했다. 이 시기를 55년 체제라고 부르는데, 55년 체제의 특징으로 자민당 일당우위체제 또는 1.5 정당제의 지속과 보수·혁신 이념 대립 구도를 꼽을 수 있다. 즉 집권당이던 보수 자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제1야당인 혁신 사회당은 자민당의 절반 수준의 의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군소 야당이 공존하는 체제였다.

<표 1> 역대 총선에서 자민당의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 1976~1993 (%)

중선거구제	1976	1979	1980	1983	1986	1990	1993
득표율	41.8	44.6	47.9	45.8	49.4	46.1	36.6
의석수 비율	48.7	48.5	55.6	48.9	58.6	53.7	43.6

이러한 자민당 일당우위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된 가운데, 정치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순응적이고 복종적인 일본인들의 특성을 강조했고, 제도적 관점에서 중선거구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이익유도정치(利益誘導政治)로 불리는 자민당의 후견주의적 행태를 꼽을 수 있다. 자민당은 빠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대도시 지역이나 대기업의 이익을 농촌 지역이나 중소기업 또는 비효율적이고 비경쟁적인 부문에 분배함으로써, 이들 수혜자로부터 선거에서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이념에 집착하던 사회당과 달리 포괄정당화 한 자민당은 게이단련(經團連)이나 노교(農協)와 같은 이익집단은 물론 다양한 유권자 집단에 정책적,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후견주의를 통해 안정적 우위 체제를 형성한 것이

다. 자민당의 일당 우위를 설명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요인으로 ‘후원회 정치’를 들 수 있다. 이 또한 후견주의의 일종으로 개별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구 유권자들과의 대면 접촉과 민원 해결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선거 시에는 득표 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보이던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는 자민당의 금권정치와 파벌정치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정치적 부패 사건들을 겪으며 붕괴하기 시작했다. 1988년에는 전직 나카소네(中曽根康弘) 총리는 물론 현직의 다케시타(竹下登) 총리도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리쿠르트 뇌물 사건이 있었고, 1992년에는 가네마루(金丸信) 자민당 부총재가 연루된 사가와규빈 뇌물 사건이 터졌다. 자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1993년 7월의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제1당의 지위는 유지했지만 과반 획득에 실패했다. 이를 기회로 일본신당(日本新党)이 중심이 되어 비자민연립정부를 수립했다. 하지만 비자민연립정부 내부의 갈등이 계속되며 정권을 지속하지 못했고, 1994년 6월에 사회당의 무라야마(村山富市)를 총리로 하는 자민당, 사회당, 신당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1996년 1월에는 자민당의 하시모토(橋本龍太郎)가 연립정부의 총리가 되었다. 자민당은 과거 55년 체제와는 달리 연립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기 시작했는데, 1999년에 공명당(公明党)과 연립을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2. 선거제도 개혁과 민주당의 성장

자민당 일당우위의 55년 체제가 붕괴된 후 일본 정당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로 선거제도 개혁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중선거구제가 금권정치와 파벌정치, 이익유도정치와 정치적 부패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양당제를 추구하기 위한 소선거구제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완전한 소선거구제는 아니지만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제를 병립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 1996년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 300명, 비례대표구 200명을 선출했으며 2000년에는 비례대표구 의석수를 180명으로 줄였다. 이후의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제도는 금권정치나 이익유도정치의 특성을 약화시키며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거 경쟁 방식 또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1985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참의원 의원의 선거구 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 후보자 중심의 선거 전략의 유효성이 감소되고 정당의 중요성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濱本真輔·根元邦朗 2011).

한편 55년 체제에서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하던 사회당은 자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이후 지속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사회당은 탈냉전으로 인한 환경적 변화와 자민당 연립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정체성의 혼란으로 점차 지지를 잃었다. 사회당의 무라야마 총리는 1994년 7월의 국회 연설을 통해 미일안보조약의 견지, 자위대 합헌, 일본의 국기와 국가 존중을 표명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사회당의 노선에 반하는 것이었다(이기완 2003, 285). 사회당의 몰락은 전후 일본의 정당정치에 있어서 이념적 연계가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헌법 개정이나 미일안보조약 등을 두고 대립하던 자민당과 대립하던 사회당의 쇠퇴는 이념에 근거를 둔 유권자 동원 방식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반면 1998년에 새롭게 결성된 민주당은 점차 사회당을 대체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이후의 일본 정당정치에 있어서 보수 정당들이 혁신 정당들을 밀어내며, 보수 정당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박철희 2014).

후견주의적 연계(clientelistic linkage)를 통해 지지를 확보해 온 자민당과 달리, 정책적 비전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민주당은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선거에 활용했다. 이는 또한 다양한 이념 및 정책 성향을 지닌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다(中北浩爾 2012,

172). 민주당은 자민당의 관료주도 정치와 이익유도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공공사업 축소를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도시지역 무당파층을 중심으로 큰 지지를 얻었다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이 두드러졌는데, 비례대표구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서 민주당이 획득한 무당파층의 투표수는 자민당에 비해 4배나 많았다(Thies 2002, 153). 이어 2000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정권교체와는 무관했지만, 민주당이 선거 전 95석에서 127석으로 증가하며 승리를 거둔 반면 자민당은 271석에서 233석으로 줄어드는 큰 패배를 당했다. 이후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일본의 정당체제가 55년 체제에서의 자민당 일당우위체제와 달리 양당제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양당에 더해 몇몇 군소정당이 병존하는 2.5정당체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의원 다수당이 되고,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집권여당이 되면서 일본 정당체제의 양당제적 성향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표 2> 일본 중의원 선거결과 (2000-2009)

	제1당	제2당	제3당	제4당	제5당
2000	자민당(233)	민주당(127)	공명당(31)	자유당(22)	공산당(20)
2003	자민당(237)	민주당(177)	공명당(34)	공산당(9)	사민당(6)
2005	자민당(296)	민주당(113)	공명당(31)	공산당(9)	사민당(7)
2009	민주당(308)	자민당(119)	공명당(21)	공산당(9)	사민당(7)

3. 자민당의 선거 패배와 정권교체

위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주당은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반면, 자민당은 전체 의석 중 단지 119석(24.8%)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특히 직전 선거인 2005년 선거에

서는 전체 의석 중 296석(61.7%)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의 선거 유동성(electoral volatility)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당파층의 증가와 고정 지지층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 매니페스토 선거를 강조한 민주당은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 ‘탈관료’를 선언했으며, 자민당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나 보조금 문제, 공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비판하며 ‘정치주도’론을 내세웠다.¹⁾ 이후 지속적으로 관료주도 정부 운영의 문제와 이익유도정치를 비판하던 민주당은 2007년 ‘국민생활이제일(国民の生活が第一)’을 내걸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고이즈미 개혁 이후의 불평등 확대, 격차문제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 이후 보편적 복지와 생활정치를 강조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 반면, 리더십 위기와 당내 갈등이 심화된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게 되었다. 2009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308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는데,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자민당에 대한 불만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진창수 2014, 14). 그렇다면 안정적인 우위를 유지하던 자민당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자민당의 유권자 연계, 지지 확보 전략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둔다면, 고이즈미 개혁으로 인해 전통적 지지층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II. 자민당의 지지 확보 전략의 변화와 선거

1. 고이즈미 개혁과 후견주의의 약화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 동원 방식은 후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자민당 의원들의 후원회 정치가 그러한 역할을 수

1) http://archive.dpj.or.jp/policy/manifesto/images/Manifesto_2003.pdf
(최종검색일: 2020/08/20.).

행했으며, 정당 차원에서 본다면 자민당 정부가 특정한 이익집단이나 지역에 제공한 정책적, 물질적 보상을 통해 선거에서의 지지를 획득했다. 공공사업, 지방에 대한 교부세, 비경쟁적 산업에 대한 보조금, 보호주의적 정책 등을 수단으로 하는 후견주의는 도시 지역 유권자들이나 수출 중심 대기업들의 불만, 야당의 반대 등을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다(Scheiner 2007, 277). 특히 1990년대에는 일본 경제의 침체와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적 부패 스캔들 등이 겹치며 후견주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1998년의 참의원 선거와 2000년의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기존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잘 드러난 선거였다. 집권당의 지위를 위협받은 것은 아니지만, 1998년과 2000년의 선거는 패배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그 원인이 대도시 지역 무당파층의 반(反)자민당 정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었다(Kabashima 2000; 2002). 자민당은 도시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총재 직속기구로 '자민당 도시문제대책협의회'를 설립했으며, 1999년에는 참가학회를 통해 도시지역에 강력한 조직표를 가지고 있는 공명당과의 연립을 구성했다. 이는 도시지역에서의 자민당 지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Reed 2003).

한편, 약화된 후견주의는 자민당의 집표 능력 약화로 이어졌다. 특별 우편국장의 조직인 다이쥬(大樹の会)는 1980년 참의원 선거에서 103만표를 동원했지만 2001년에는 47만표를 동원하는데 그쳤고, 1980년 174만표를 동원했던 일본건설업단체연합회는 2001년에는 27만표를 동원하는데 그쳤다(日経新聞 01/08/01). 당시 도시무당파층은 자민당의 후견주의와 이익유도정치에 대한 반감이 강했는데, 이를 비판하는 경쟁적 야당(민주당)의 등장으로 반(反) 후견주의 정서가 더욱 강해졌으며, 언론 또한 자민당의 정책들이 부패와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으로 비판했다. 고이즈미의 등장은 이러한 후견주의 연계 방식의 변화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Scheiner 2007, 295-296).

2001년에 등장한 고이즈미 정부는 파벌 정치로 상징되는 자민당 정치를 개혁했으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목표로 공공사업을 축소한다는

지 공단을 민영화 했는데, 이는 기존 지지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우정민영화 과정에서 자민당은 과거 주요 지지 조직이던 '전국특정우편국장회'와 갈등했으며,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사회'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김성조 2018, 58). 이와 같이 고이즈미의 개혁은 자민당의 후견주의적 연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반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거전략 차원에서 고이즈미의 신념과 관련되는데, 고이즈미는 도시형 선거구가 증가한 소선거구제 하에서 농촌 지역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자민당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고, 이익유도정치를 반대하는 일반유권자들의 지지 확대를 추구했다(이주경 2016, 222).

우정선거(郵政選挙)로도 불리는 2005년 중의원 선거는 고이즈미의 전략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고이즈미는 우정민영화를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을 '저항세력'으로 비판하는 한편, 여론을 통해 자신을 개혁세력으로 각인시키며 선거에서 상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당시 선거에서 승리한 고이즈미 총리는 무당파층을 보물산(寶の山)으로 비유했다(井田正道 2007, 48). 하지만 유권자를 직접 상대하는 고이즈미의 포퓰리스트적인 정치 수법은(大嶽秀夫 2003), 단기간의 지지 확보에는 유용한 방식이었지만 안정적인 연계 유지 및 지지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이후 자민당 패배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정치에 반감을 갖고 있던 대도시의 신중간층 및 무당파층을 지지층으로 흡수하여 성과를 내긴 했지만, 자민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하고 농민이나 중소상인들과 같은 기존 지지 조직의 약화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이기완 2006, 192).

2000년대 일본의 정당정치에서 나타난 현상은 무당파층의 증가와 투표율 저하, 보수적이고 포퓰리스트적인 지도자들의 등장과 이들에 대한 높은 대중적 인기, 국정리더십의 잦은 교체나 제1당 쏠림 현상과 같은 정당정치의 불안정이었다(한익석 2014, 76). 이는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정당들이 유권자들과 안정적인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사회균열과 같이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을 제도정당이라고 하고 상황에 따른 특정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을 조직정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김상준·김지강 2013, 285), 이 중 조직정당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의 정당정치 현상은 조직정당임에도 파벌간의 타협과 후견주의적 정책들을 통해 장기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자민당과 유권자 사이의 연계가 불안정해졌음을 의미한다. 당원 및 지지층의 감소와 연계 약화는 2006년 아베 1차 내각이 성립된 이후 후쿠다(福田康夫), 아소(麻生太郎)로 이어지는 자민당 1년 총재 시대에도 계속되었으며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2. 자민당의 재집권과 선거

2012년 12월 자민당이 재집권하게 된 이후 아베 정부에서 치러진 두 번의 중의원 선거(2014년, 2017년)와 세 번의 참의원 선거(2013년, 2016년, 2019년)에서 자민당이 모두 승리했다. 특히 중의원의 경우 55년 체제하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자민당의 의석수 비율은 대체로 50% 전후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자민당이 재집권하게 된 2012년 선거에서 전체 의석 중 자민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61.3%에 해당하며, 2014년에도 61.3%, 2017년은 60.4%에 해당하는 등 오히려 55년 체제보다 더 높은 의석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제2차 아베 내각 이후의 중의원 선거 결과

	제1당	제2당	제3당	제4당	총의석 수
2012	자민당(294)	민주당(57)	일본유신회(54)	공명당(31)	480
2014	자민당(291)	민주당(72)	유신당(41)	공명당(35)	475
2017	자민당(284)	입헌민주당(55)	희망의당(50)	공명당(29)	465

또한 참의원 전체 의석 중 절반(개선의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참

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민진당, 입헌민주당)이 획득한 의석수는 자민당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이처럼 중의원 선거는 물론 참의원 선거 결과는 제2차 아베 내각의 성립 이후, 55년 체제와 같은 자민당의 일당우위 체제가 재현된 것으로 보이도록 한다.

<표 4> 제2차 아베 내각 이후의 참의원 선거 결과

	제1당	제2당	제3당	제4당	개선의석 수
2013	자민당(65)	민주당(17)	공명당(11)	민나노당(8)	121
2016	자민당(56)	민진당(32)	공명당(14)	공산당(6)	121
2019	자민당(57)	입헌민주당(14)	공명당(17)	국민민주당(6)	124

그렇다면, 이러한 자민당의 우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자민당 우위의 재현에 대해 소선거구제의 특성과 자민당의 적응력을 강조하는 주장과 아베 총리의 개인적 리더십에 주목하는 주장,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아베-자민당의 정책성과(policy performance)를 강조하는 주장들이 있다(박철희 2018, 52-54). 아베노믹스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가 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비판도 있지만,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경기동향지수’는 전후 최장기 호황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실질 GDP와 기업수익, 주가 상승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유효구인배율(有效求人倍率)은 2012년 12월에 0.82였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12월에는 1.27, 2018년 11월에는 1.63배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20-30대 젊은층의 자민당 지지로 이어졌다.

아베 정권 시기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에 비해 투표율이 더욱 낮은 상황으로 치러졌다는 점이다. 1990년대부터 투표율이 점차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특히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아베 정권기에 치러진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무당파층의 지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고정된 지지표를 많이 확보하고 있

는 정당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동하게 되었다. 2014년 중의원 선거는 전후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2017년 중의원 선거가 그 뒤를 이었다. 낮은 투표율에도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조직표가 동원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이면우 2018, 131).

<표 5> 중의원 선거 투표율, 2000-2017

연도	2000	2003	2005	2009	2012	2014	2017
투표율(%)	62.49	59.86	67.51	69.28	59.32	52.66	53.68

출처: 총무성(總務省)

<표 6> 참의원 선거 투표율, 2001-2019

연도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2019
투표율(%)	56.44	56.57	58.64	57.92	52.61	54.70	48.80

출처: 총무성(總務省)

더욱이 아베 정권에서 치러진 선거에서는 무당파층의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더욱 높아졌다. 2009년 자민당의 패배 요인 중 하나가 민주당에 대한 무당파층의 적극적 지지였다고 한다면, 2012년 총선 이후 자민당에 대한 무당파층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높거나 유사했다(이이범 2017, 207). 이러한 현상은 아베노믹스의 신자유주의적 특성이나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제적 성과를 통해 무당파층의 상당수가 과거와 달리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비례대표 선거에 나타난 무당파 투표자의 정당선택, 2007-2016 (%)

	2007 참의원	2009 중의원	2010 참의원	2012 중의원	2013 참의원	2014 중의원	2017 참의원
무당파비율	21.0	29.9	21.0	32.9	21.0	24.0	24.0
자민 지지	14.0	16.4	16.0	20.7	25.0	23.0	26.0
민주 지지	51.0	54.0	30.0	16.3	14.0	21.0	27.0

출처: 이이범 (2017, 206)

아베 총리가 국난돌파선거로 규정한 2017년의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분열이 자민당의 승리와 안정적 의석수 확보로 이어졌다. 선거 전 제1야당이던 민진당(民進党)은 의원총회에서 희망의당(希望の党)에 합류를 결정했지만, 이를 거부한 일부가 에다노(技野幸男)를 중심으로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이 결성되었다. 2009년의 정권교체 이전에는 이념·정책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그룹들이 민주당을 결성하여 반(反)자민당과 정권교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걸고 정책적 대립축을 형성했지만, 2012년 이후의 야당은 구심점을 잃고 이념·정책적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분열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1당 프리미엄에 더해, 기존의 정당조직이 견고한 자민당은 289개 소선거구 가운데 277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했고 215명을 당선시켰다(이이범 2017, 207).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청년층의 지지로 이어졌다. NHK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중 자민당에 투표한 비율이 각각 50%, 42%로 전 연령대 중 제일 높았는데, 이는 고이즈미 시기와 2012년 선거에서 같은 연령대의 자민당 투표율이 30%내외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東洋經濟 17/10/31).²⁾ 이와 같은 정책성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요인이라면, 장기적 요인으로 공명당과의 연립을 통한 도시지역 유권자들의 지지 확대 전략을 자민당이 선거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점하는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3. 자민당의 지지 확보 전략과 재집권

1990년대 자민당 일당우위의 55년 체제가 붕괴된 이후, 자민당 내에서는 자민당의 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 선택이 논의되었다(박철희 58-59). 첫 번째는 노나카(野中広務) 전 간사장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전통적 기반 위에

2) <https://toyokeizai.net/articles/-/195199>(최종검색일: 2020/05/12).

공명당을 연합세력으로 확보하면 자민당의 우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강조했던 무당파 지지 확대 전략이다. 총리가 되기 전부터 고이즈미는 자민당의 전통적 기반인 농촌 지역이나 이익단체들의 지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도시 무당파층의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자민당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나카가와(中川 昭一)와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우파적인 성향의 지지층을 확대해나가는 신보수(新保守) 강화 전략이 있었다.

2009년 야당이 된 자민당은 고이즈미식의 무당파층 지지 확보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전통적인 방식에 더해 보수주의 세력을 규합하는 전략을 택했다. 2009년 8월 31일 총선 직후 자민당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아소 총리는 자민당 지지가 저하되고 있는 원인으로 보수의 매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 농업, 건설업, 상업 등 종래의 지지기반이 약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고이즈미 개혁 과정에서 이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주경 2016, 223). 즉 보수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했다는 점과 후견주의적 연계의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후 자민당의 유권자 연계, 지지 확보 전략에 잘 반영되어 있다. 아베는 2004년 부시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모델로 생각했으며, 자민당이 향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풀뿌리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한 무당파층의 지지 유지는 물론, 헌법 개정 등을 통한 풀뿌리 보수 동원이 아베의 전략이라 평가할 수 있다(中北 浩爾 2012, 157-158).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적 보수와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보수를 규합하여 풀뿌리 보수를 구축하여 유동적인 유권자 지지를 구조화하고 고정표를 확고히 것이 아베의 전략이다(박철희 2018, 54; 이주경 2016, 224).

고정표의 중요성은 정당 지지층이 무당파층 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 2009년 중의원 선거를 예외로 하면, 정당지지층이나 무당파 모두 투표참여 비율

이 낮아지고 있는데 무당파의 참여율 감소폭이 정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정당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당파 층의 표를 얻기 위한 노력보다 더 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밝은선거추진협회(明るい選挙推進協会) 자료를 활용한 <표 8>의 투표 참여율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8> 중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층과 무당파층의 투표 참여율 비교 (%)

	2005년	2009년	2012년	2014년
정당지지층	90.0	91.0	82.3	79.0
무당파층	71.7	77.0	63.6	52.3

출처: (김용복 2016, 56).

이러한 현상은 무당파층을 중시한 고이즈미가 투표율이 높을 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고정표를 중시하는 아베는 투표율이 낮을 때 더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中北浩爾 2017, 288). 그렇다고 아베 정권이 고이즈미 정권에 비해 무당파층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이에 더하여 자민당은 지방조직 강화와 일본의사회, 농협 등 우호 단체와의 관계 재구축을 통해 지지 기반을 공고화했다(中北浩爾 2017, 287).

IV. 아베-자민당의 지지 확보 전략

1. 후견주의의 회복과 보수주의

고이즈미 개혁으로 인한 후견주의적 연계의 약화와 이익단체 및 지방(농촌) 지지 기반의 쇠퇴는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의 패배로 나타났다. 고이즈미 정권 시기이던 2005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전통적인 우호단체들과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집표력이 감소했다. 2007년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총괄위원회 보고서는 패배의 원인을 ‘지방의 반란’ 즉 기존의 당 지지 기반 약화가 패인이라고 내용을 담았고, 우호단체(友好団体) 및 업계(業界)와의 관계 약화에 대한 위기감을 보여주었다(中北浩爾 2017, 198). 더욱이 2009년 중의원 선거의 패배로 야당이 된 자민당 내부에서는 지방조직의 강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되었다(中北浩爾 2017, 229).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은 2009년 12월의 정권구상회의 제2차 보고를 통해 ‘올바른 보수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구체적 정책 내용으로는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반대, 선택적 부부 별성제(別姓制) 반대, 센카쿠열도 중국어선 충돌사건에 대한 강력한 항의 등 보수적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中北浩爾 2017, 248). 즉 자민당은 보수 이념을 활용하여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는데, 특히 보수적 종교집단을 유권자들과의 연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에 의지했던 자민당은 공명당(참가학회)과의 연립을 통해 온건·중도 보수를 확보하는 한편 좀 더 우경화된 이른바 신보수주의 세력을 새롭게 확보하여 안정적 지지 기반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박철희 2018, 66). 재집권 후에는 아베-자민당의 정책에 담긴 신자유주의적인 특성과 경제적 성과를 통해 무당파층의 지지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한편, 보수주의와 연계된 조직화된 집단의 지지를 통해 안정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박철희 2018, 66). 보수 사회단체인 일본회의(日本会議)와 자민당의 관계가 대표적 사례이다.

자민당은 또한 야당시절부터 국토강인화(国土強靱化) 법안을 작성하여 전통적인 이익유도정치로 회귀하려는 강한 의도를 보여주었다(中北浩爾 2017, 250).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 내건 아베노믹스의 경우에도 민간 기업과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개혁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는 과거와 같이 공공사업을 통한 후견주의적 행태의 여지를 두는 것으로,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한 이후에 공공사업비

나 토지개발예산 등이 매년 증액되었다. 자민당은 지방창생(地方創生)을 내세우며 지방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이를 통해 지역 이익단체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김성조 2018, 59). 자민당은 2015년 4월의 통일지방선거에서 지방창생을 적극 내세워 승리를 도모했으며(中北浩爾 2017, 231), 도시 지역의 의원들이 농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과의 연대(絆)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中北浩爾 2017, 250).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들 중 50% 이상이 자민당 소속에 해당되는데 이는 지방정치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자민당의 노력과 연결된다(박철희 2018, 68).

2. 정당교육과 지방정치학교

중앙당 기관인 중앙정치대학원(中央政治大学院)은³⁾ 자민당 창당 후 당원들의 자질 향상과 인재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1957년 9월 개교했다. 1993년 당 기구의 개편과 함께 다른 기관과 통합(사실상 폐지)되었지만, 당원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2001년에 다시 설립되었다. 아베 총리 시절이던 2007년에는 입학금 및 수강료를 전액 무료로 할 만큼 중시했지만, 2009년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최희식 2012, 68). 하지만 2010년 1월 당대회를 통해 중앙정치대학원에 관계된 당칙을 개정하여 도도부현 지부가 지방정치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中北浩爾 2017, 250). 지방정치학교 설립은 지방의 조직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앙정치대학원은 당 총재가 총장직을 겸임하게 되며 2020년 9월 현재 10선의 중의원 의원인 나가타니(中谷元)가 학원장을 맡고 있다. 중앙정치대학원은 강사파견 등을 통해 지방정치학교를 지원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세미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원은 물론 일반시민이나 학생도 중앙정치대학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

3) 중앙정치대학원 홈페이지. <http://daogakuin.jimin.jp>(최종검색일: 2020/09/13).

다. 2010년 11월부터는 타업종스터디그룹(異業種勉強会), 대학세미나 등을 대상으로 마나비토프로젝트(まなびとプロジェクト)라고 부르는 강좌를 제공하고, 2011년 6월부터는 회원등록제로 예약에 따라 운영하는 마나비토프로젝트(まなびとスクール)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는 마나비토프로젝트(まなびとwomen)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특히 자민당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무당파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당 임원 등이 직접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나비토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경우 대외정책에 대한 주제들을 많이 다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아베 정권의 특징인 외교안보적 보수라는 이념적 지향점을 하부 조직 및 당원에게도 잘 전달하여 당원들의 응집성을 강화하려는 노력과도 연결되어 있다(이주경 2016, 225).

<표 9> 마나비토프로젝트 프로그램 사례

일시	강사	강의 주제
2016.4.12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참의원 의원	TPP협정을 둘러싼 정세
2016.5.17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중앙정치대학원장	일본의 방위 및 안보정책 - 적극적 평화주의를 향해
2016.10.3	아다치 마사시(阿達雅志) 참의원 의원	패러다임 변화 중인 세계와 일본

출처: 중앙정치대학원 홈페이지

2010년 당칙 개정을 통해 공식화된 지방정치학교는 2012년 12월 총선 전까지 28개의 도도부현연(都道府県連)에 설립되었으며 점차 확대되어, 2020년 현재 47개 도도부현연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 지방정치학교는 중앙정치대학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대체로 지방조직의 청년국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일반 코스와 전문정치 코스를 구분한다. 전문정치 코스는 지역 차원의 정치지방생 발굴 및 충원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치학교 또한 당원 및 비당원을 대상

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세부적 강의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민당의 역할,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민당 본부 및 국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3. 정당 조직의 확장과 당원획득운동

2015년 자민당의 당 운동방침에⁴⁾ 따르면, 지방에 입각한 국민정당의 강점인 ‘조직력’을 강화하자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120만 당원획득운동 전개, 보수계 지방의원과의 협력, 지방의원 조직활용, 청년 단체와 교류 및 학생부 설치, 아이행복 프로젝트, 우호단체와의 관계 강화 및 노조와의 교류 증대, 중앙정치대학원을 활용한 무당파 및 청년층의 관심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 중 120만 당원획득운동이 주목할 만한데, 자민당의 당원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당원 가입 신청 시 소개하는 당원이 필요하며, 없는 경우에는 지부 상담이 필요하다. 가족 당원으로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 일반당원 한 명이 있어야 한다. 자민당의 당원은 당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 임원의 선출 및 후보자 결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각 회의와 출판물을 통해 당의 활동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⁵⁾

자민당의 당원 수는 1991년도에 약 547만명에 이를 만큼 증가했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8년 말에는 106만명에 불과했으며 2009년의 선거 패배 이후에는 더욱 감소했다(読売新聞 16/10/02). 야당이 된 자민당은 다니가키(谷垣禎一) 총재 시기 키즈나(絆)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유권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했고, 2011년 부터는 여성당원 획득 운동인 ‘키즈나 플러스 원 캠페인(絆プラスワンキャンペーン)’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13년 아오모리현(青森県)지부연합회의 청년

4) <https://www.jimin.jp/aboutus/convention/82/127299.html> (최종검색일: 2018/11/11).

5) <http://www.jimin.jp/aboutus/pdf/organization.pdf>(최종검색일: 2020/09/10).

국 및 여성부 활동방침에 따르면,⁶⁾ 청년층·무당파층에 대한 정책의 침투를 위해 고향(ふるさと) 대화집회, 의견교환회, 연수회, 이자카야 토크(talk) 등 각종 대화 모임을 활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아오모리 정치숙(政治塾)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가두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여성부의 경우 조직의 정비, 당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 활동과 ‘키즈나 플러스 원 캠페인’을 지속하며, 여성부 임원들이 친밀한 곳에서 반드시 1명의 당원을 획득하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이처럼 당세 확장을 위한 노력이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 수행되었는데, 자민당은 2014년 1월 당시 간사장이던 이시바(石破茂)는 당원수의 회복을 위해 ‘120만 당원획득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자민당의 야마구치(山口泰明) 조직운동본부장은 당세 확대를 위한 활동 방침으로 첫째, 선거구당 4,000명 이상 당원획득(선거구 지부장 단독으로 1,000명 이상), 둘째, 단체총국(団体総局)의 15개 단체위원회를 활용한 ‘단체’에 대한 대응, 청년국과 여성국의 활동을 강조했다(自由民主 第2673号 15/11/04).⁷⁾ 특히 2015년 말까지 2년간 소속의원 1인당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획득하도록 지시했으며,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1명당 2천엔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産経ニュース 16/05/14).⁸⁾ 한 자민당 간부는 “당원획득 운동은 선거 기반이 약한 젊은 의원들이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시작, 작년말에 마감했지만 젊은 의원 160명이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집행부가 벌금을 청구하는 것은 총선을 위한 활동이 미진한 젊은 의원들을 재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진술했다.⁹⁾ 정권 복귀 직후인 2013년 초에 78만명을 기록했던 당원 수는 2015년 말 약 98만명으로 증가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2016

6) https://www.jimin-aomori.jp/information/2013/20131123_01.pdf (최종검색일: 2018/11/09).

7) <https://www.jimin.jp/activity/colum/130855.html> (최종검색일: 2018/11/09).

8)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60514/plit160540002-h1.html> (최종검색일: 2019/01/05).

9)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60523_414342.html?DETAIL (최종검색일: 2020/09/13).

년 9월말에 100만명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読売新聞 16/10/02). 이러한 노력은 자민당이 기본 조직 강화를 당의 안정을 위한 최우선 요소로 고려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처럼 아베-자민당의 당원획득운동이나 조직운영 방침을 보면 지역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 지역(지방) 조직을 중심으로 청년 및 여성, 무당파층을 대상으로 한 접촉 및 홍보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후원회 조직이나 각 분야별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의견 청취 등을 강조하고 있다.

V. 결론

고이즈미 총리의 퇴진 이후 벌어진 1년 총리 시대와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통해 일본의 정당체제가 양당제적 경향을 강화하며 2.5정당 체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분열에 뒤이은 자민당의 재집권 이후 아베 정권기에 치러진 네 차례의 선거 결과를 통해 과거와 같은 자민당의 일당우위가 재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다양한 장·단기적 요인들과 국내외의 변수들이 있을 것이다. 아베 전 총리의 리더십이나 아베 노믹스로 인한 성과 및 야당의 분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등이 자민당의 선거 승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자민당 우위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정당 차원에서 아베-자민당의 유권자 지지 확보 전략, 고정 지지층 확보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55년 체제에서와 같은 후견주의적 행태가 가능하기도 어렵고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고이즈미는 자민당의 정치 행태와 정책 변화를 통해 무당파층, 특히 도시지역 무당파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러한 전략이 일시적으로 성공적이었음은 2005년의 중의원 선거를 통해 잘 드러나지만, 전통적 지지 기반의 붕괴 즉 고정 지지

층의 약화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음이 2007년의 참의원 선거와 2009년의 중의원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야당이 된 자민당과 재집권 이후의 아베-자민당 정권은보수주의적 외교안보 정책과 사회적 보수 가치의 강조를 통해 보수주의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후견주의의 일부 회복을 통해 다양한 이익집단과 지방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앙당은 물론 지방 조직을 활용한 당원획득 운동을 통해 핵심적인 지지층의 확보에 주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베-자민당 시기 선거 승리의 기반이 되었다.

<참고문헌>

- 김상준·김지강. 2013. “일본 야당의 취약성: ‘조직정당’과 협소한지지 기반.”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1호, 279-302.
- 김성조. 2018. “대통령제화와 자민당 정치의 변용: 고이즈미와 아베시기의 비교.” 『일본공간』 23호, 33-65.
- 김용복. 2016. “일본 정당정치의 유동성과 무당파: 최근 선거 결과의 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2호, 39-68.
- 박철희. 2018. “아베 시대 자민당 우위체제 재구축 전략: 역사적 전개와 지속 가능성.” 『아태연구』 제25권 3호, 49-77.
- _____. 2014.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비평』 10호, 71-97.
- 이기완. 2003. “1990년대 일본정치의 변동과 사회당: 사회당 노선전환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275-293.
- 이면우. 2018. “일본의 2017년 중의원총선거 결과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5집, 123-148.
- 이이범. 2017. “2017년 제48회 일본 총선거와 정당시스템의 변화.” 『일본공간』 22호, 196-220.
- 이주경. 2015. “일본 참의원 선거와 정당의 집표전략: 자민당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8권 1호, 39-72.
- _____. 2016. “일본 정치개혁 이후 자민당의 정책변경 분석: 정당-유권자 연계 설정과 정책과의 상관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213-238.
- 진창수. 2014. “민주당 정권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창수·신정화 엮음.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서울: 오름.
- 최희식. 2012. “일본 시민정치교육의 역사: 의회와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치와 평론』 제10집, 59-80.
- 한의석. 2017. “일본정당정치의 변화와 지속: 199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45호, 5-31.
- _____. 2014. “일본 정치의 변화와 정당-유권자 연계: 2000년대의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4호, 75-95.

- Kagashima, Ikuo. 2000. "The LDP's 'Kingdom of the Regions' and the Revolt of the Cities." *Japan Echo* Vol 27, no, 5, 22-28.
- _____. 2002. "Support for Koizumi Administration."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 no, 2, 285-287.
- Reed, Steen R. 2003. "Who Won the 2000 Election?" in Steven R. Reed ed. *Japanese Electo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Curzon.
- Scheiner, Ethan. 2007. "Clientelism in Japan: the importance and limits of institutional explanations." in Herbert Kitschelt and Steven I. Wilkinson eds. *Patrons, Clients, and Polic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ies, Michael F. 2002. "The General Election in Japan, June 2000." *Electoral Studies* Vol. 21, 147-154.

- 井田正道. 2007. 『日本政治の潮流: 大統領制化・二大政党化・脱政党』. 東京: 北樹出版.
- 大嶽秀夫. 2003. 日本型ポピュリズム—政治への期待と幻滅. 東京: 中央公論新社.
- 中北浩爾. 2012. 現代日本の政党デモクラシー. 東京: 岩波書店.
- _____. 2017. 自民党—「一強」の実像. 東京: 中公新書.
- 濱本真輔·根元邦朗. 2011. "個人中心の再選戦略とその有効性: 選挙区活動は得票に結び付くのか?" 『年報政治学』 2011-II, 70-97.

자민당 홈페이지. <http://www.jimin.jp/>

총무성 선거관련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index.html/

투고일 : 2020년 9월 15일 . 심사일 : 2020년 9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0월 4일

* 한익석은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저서로 『공공외교의 이해』, *Social Change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와 아베 총리의 개헌구상" 등이 있다.

<Abstract>

LDP's Predominance under Abe Government : Abe-LDP's voter-mobilizing strategies

Euisuok Ha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ince the collapse of '55 political party system' in 1993, Japanese party system had shown a shift to 2.5 party system with the Liberal Democratic Party(LDP) and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as two main parties. However, after the defeat of the DPJ in 2012, it is witnessed that reconstruction of the LDP's predominance started under the Abe government, as observed in national elections. There are several factors to explain the LDP's electoral victories under Abe's stewardship such as prime minister Abe's leadership, economic performance, splits of opposition party etc. Among those factors, this study focus on the LDP's voter-mobilization strategies, showing that the LDP has made efforts to recovering a clientelistic linkage, educating youth and women using party-education institutes, and increasing party membership.

Keywords : Abe Government, Clientelism, Conservatism, Party Education Program, Party Membership